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 전환이 주는 의미

무역흑자 대국 일본이 31년 만에 무역적자로 반전, 앞으로 수년간 무역적자 탈피가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에너지자원의 수입증가 압력과 글로벌 경쟁, 후발국의 추격 등에 직면, 세계경제의 고성장과 함께 엔저로 반전되지 않는 한, 일본의 무역적자는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예측이 있기는 하나, 이제까지 일본이 무역흑자국으로서 강한 정책을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그리 쉽게 적자 기조가 정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무역흑자 대국 일본, 31년 만에 무역적자국으로 반전

- 일본이 작년에 원전사고의 영향에 따른 연료수입 증가로 31년 만에 무역적자국으로 반전. 지금상태로는 앞으로 수년간 무역적자 탈피가 불가능하다는 전망
- 11년 2.49조 엔의 무역적자가 발생(80년 이후 처음), 이는 엔고, 원전사고로 인한 LNG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이 요인으로 분석
 - 우리나라와의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29.0% 감소, 수출은 3.5%감소한 5.2조엔, 수입은 26.5% 증가한 3.1조엔

〈일본의 2011 무역통계〉

(단위: 엔)

수출	65조5,547억	△2.7%	2년 만에 감소
-對한국	5조2,688억	△3.5%	
수입	68조 474억	12.0%	2년 연속 증가
-對한국	3조1,684억	26.5%	
무역수지	-2조4,927억	-	31년 만에 적자
-對한국	2조1,003억		

(자료)재무성 「2011년 무역통계(속보)」

- 해외에서 이자나 배당으로 적자를 보전해야하는 일본경제는 자금의 해외유출로 국채 소화 등 국가의 재정운영도 해외에 의존해야만 하는 등 기로에 서 있음

□ 앞으로 수 년 동안은 적자기조 정착

- 문제는 무역적자가 구조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는 것임. 원전가동율이 지진발생 이전보다 떨어질 경우, 대체연료인 화력발전연료 수입이 늘어나고 유럽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감속하게 되는 경우 일본의 수출도 감소
 - 2002~2007년처럼 세계경제의 고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엔저로 반전되지 않는 한, 일본의 무역적자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예측이 지배적임
 - 고이즈미 정권 당시 2005년 4월 경제재정자문회의 「일본 21세기 비전」에서 일본이 2030년에 무역 적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리먼 쇼크와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의 무역구조변화가 예상보다 20년 앞당겨진 셈
 - 더욱이 21세기 비전에서는 무역적자로 반전되더라도 일본은 해외로부터 배당이나 이자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 이른바 성숙채권국으로 된다는 시나리오가 있었으나 성숙채권국 시나리오마저도 위태롭게 되고 있다는 것임
 -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수지, 이전수지 등 4개로 구성되는데, 일본의 경우 이중 서비스수지와 이전수지는 원래 적자, 무역수지와 소득수지 흑자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옴

□ 향후 소득수지의 향방이 초점

- 일본의 소득수지 흑자는 2005년 무역흑자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2007년에는 16.3조 엔까지 확대되었으나 리먼 금융위기로 인한 주요국의 금리하락으로 2010년에는 11.7조 엔 까지 축소
- 일본의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는 2015년에 14.3조 엔으로 확대되는 한편, 소득수지 흑자는 14.8조 엔에 그칠 전망이어서 서비스수지 등의 적자를 포함하면 2015년에 경상수지 적자로 반전
- 경상수지 적자는 가계·기업·정부 모두 저축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 하며, 정부가 신규 차입을 할 경우 미국과 같이 해외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발생
- 세출삭감과 증세로 재정재건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 국채이자율은 급상승하게 됨. 최근 결정된 「사회보장과 세제의 일체개혁기본안」에 의하면 소비세은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까지 인상할 예정으로 2010년대 후반 경상수지적자 반전이 현실감을 더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건전화의 중압이 한층 커지고 있음
- 소득수지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해외직접투자로 2011년 일본기업들의 해외기업 M&A는 5조엔 정도로 과거 최대수준으로 일본내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 일본의 명목 GDP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잔고 비율은 15%로 영국

(75%), 미국(31%)에 크게 미치지 못함. 직접투자수익율도 4.6%로 7~9%의 미국과 영국에 크게 뒤지는 수준임

- 일본의 소득수지 흑자는 외국채 등 채권으로부터의 이자수입에 편중되어 있으며 2011년 1~10월 흑자액의 50%를 점함. 소득수지 흑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M&A 등 해외직접투자를 늘려 배당금수입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 최근 일본기업들이 새로운 성장의 원천을 모색, 다케다 약품의 경우 1조 엔을 들여 스위스 기업을 매수 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으나 엔고로 일본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면 일본내 생산거점들도 일시에 축소, 무역적자가 확대
- 경제발전에 수반한 제조업의 완만한 해외이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급격한 산업공동화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치명적임

□ 시사점

- 1965년 무역흑자 기조가 정착된 이후, 무역흑자 대국으로 성장해 오기까지 무역흑자 유지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 일본정부는 저환율, 물가안정, 경쟁력 강화 등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
 - 특히, 1990년대 초엔고 하에서는 마른수건도 짤다는 유행어가 나돌만큼, 일본기업들이 엔고 분을 흡수하기 위해 백방으로 경쟁력 강화 수단을 모색하였음
- 일본은 무역흑자 유지에 생명줄이라고 할 만큼 무서운 집착을 보여왔으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 동물이니, 주식회사 통산성이니 일본

시장의 폐쇄성에 기인한 무역마찰의 표적 등 갖가지 악명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음

- 만약,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된다면 일본은 자본 공급자에서 대출자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됨
 - 일본은 이미 이탈리아보다 많은 부채를 안고 있으며 결국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지금은 엔화가치가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일본이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다면 결국 엔화가치가 급락할 것이며 수입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일본경제에 타격을 줄 것임
- 결국, 일본은 에너지·연료·자원의 수입증가 압력과 글로벌 경쟁, 후발국의 추격을 뿌리치기에는 피로증이 빠져 있고, 일각에서는 무역적자 기조의 정착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있지만, 그리 쉽게 적자 기조가 정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참고자료>

- 日本經濟新聞
- 일본 재무성 발표자료